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규제개혁에는 마침표가 없습니다

규제개혁 성과와 과제

2017. 4. 28 (금)



국무조정실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국민이 甲이 되는 규제개혁

규제개혁이라고 쓰고 일자리 창출이라 읽는다

규제 뿌리까지 뽑는다(斬草除根)



- 01 규제개혁의 목표
- 02 추진체계
- 03 그간의 성과
- 04 규제개혁위원회
- 05 규제개혁 효과 및 과제

고비용 저효율 경제체질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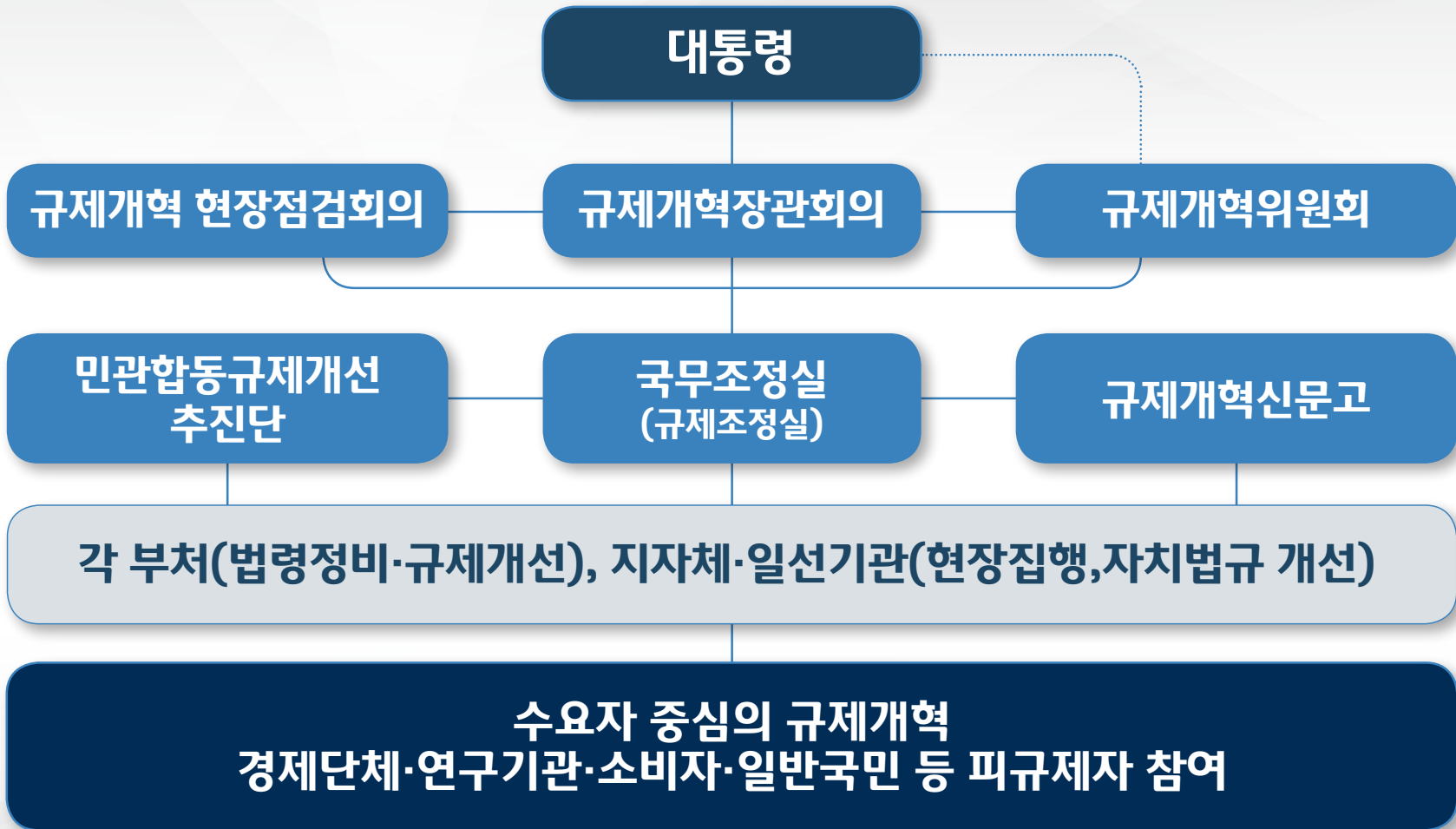
민간의 자율과 창의 극대화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최우선 국정과제 : 대통령

총 929개 규제개선 과제 발굴 → 885개 개선 완료(이행률 95.2%)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 5차례 개최('14.3~'16.5)

- ◆ '중소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인증규제 혁신방안', '신산업 규제혁신', '선제적 규제정비' 등

총 837개 규제개선 과제 발굴 → 795개 개선 완료(이행률 95%)

총 92개 현장건의 과제 접수 → 90개 신속히 개선 완료(이행률 97.8%)

- ◆ 국민참여와 신속한 후속조치로 현장 체감도 제고
- ◆ 다양한 분야의 핵심규제 발굴·개선으로 국가 경제 체질 개선

실천과 성과 중심 규제개혁

최우선 국정과제 : 권한대행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 (*16.12.28)



- 조달규제 혁신방안, 소상공인·청년창업 규제개선 등
- 총 326개 과제 중 162개 개선 완료(이행률 49.7%)

경제활성화를 위한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 (*17.2.16)



- 신산업투자위원회 운영성과, 인공지능·핀테크 규제혁신 등
- 총 137개 과제 중 68개 개선 완료(이행률 49.6%)

‘터놓고 이야기합시다!’ 규제개혁 국민토론회 (*17.2.22)



- 규제애로 관련 격의 없는 대국민소통의 장(場) 마련
- 총 136개 과제 중 58개 개선 완료(이행률 42.6%)

"규제의 뿌리까지 추적해서 제거"

참고 국민제안 공모 추진결과

총 1,141건 국민건의 접수, 규제건의 334건 중 중복건의* 제외 최종 규제건의 136건

* 전기제품 안전 인증제 완화(147건), PC방 출입제한 연령 개선(16건), 카드수수료 인하(9건) 등 220건

최종 136건 규제개선 과제 발굴 → 58건 해결

주요개선사례

고장차량 불꽃신호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판다

미용사와 네일자격자가 한 영업장에서 영업할 수 있다

8개 부처 제각각 식품 표시변경 같은 날로 맞춘다

고형비누도 화장품으로 관리한다



수용			중장기	불수용	계
수용	일부 수용	기시행	12	66	136
9	10	39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민생 건의 집중 해소

최우선 국정과제 : 총리

총 812개 규제를 발굴하여 644개 개선 추진 → 483개 개선 완료(이행률 75%)



총리주재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8차례 개최(지역순회, 격월 원칙)

‘40년만의 보세공장 규제혁신’, ‘해양레저산업 경쟁력 강화’ 등

총 734개 규제개선 과제 발굴하여 578개 개선 추진(수용률 78.7%)
→ 435개 개선 완료(이행률 75.3%)

아울러, 78개 지역현장 규제애로 청취하여 66개 개선 추진(수용률 84.6%)
→ 48개 개선 완료(이행률 72.7%)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개최일	'15.7.30	'15.10.20	'15.12.3	'16.2.23	'16.4.27	'16.6.22	'16.8.31	'16.10.20
개최지	경기 안산	광주	부산	대전	대구	원주	인천	경기 화성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우문현답)

국민이 ㅁ이 되는 규제개혁

규제개혁신문고 (On-line)

수용률 40% 수준 도달

*규제건의 10,079건 중 4,010건 수용
- 70%가 국민생활 및 민생관련 규제

국민·기업의 규제개혁
참여 기회 확대



'13년 대비

수용률 5배 상승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Off-line)

손톱 밑 가시 972건 개선

전국순회 현장간담회,
기업방문 등 현장밀착형 활동



규제기요틴 방식*

경제단체 건의 신속처리
310건 개선

*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않는
규제를 단기간에 대규모로 개선



규제개혁이 곧 민생, 국민과 기업이 불편하면 바꾼다

규제시스템 혁신

규제비용관리제



- 제도 전면 실시(27개 부처) 이후 반기별 성과('16.7~'17.1월)
- 총 5,586억원의 규제순비용 감축

네거티브 규제

금지된 것만 최소한으로
규제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



- 민간 주도 신산업투자위원회
- 4차 산업혁명 대비
네거티브 심사방식 적용

규제정보포털

국민소통형 규제개선
온라인 창구 마련



- Web-base 규제영향분석
- 규제정보 실시간 공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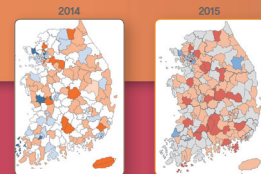
* 행정규제업무처리 지침 시행(총리훈령, '16.7월)

지방규제 혁신

11대 분야 지방규제 전수조사·정비



→ 상위법령 불일치 등 6,400건 자치법규 정비



전국규제지도 공표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

→ 상위등급(S·A) 지자체수 대폭 증가 (경제활동 친화성 : '14.12월 68개 → '16.12월 135개)

국가법령-자치법규 연계시스템 구축

→ 불합리한 조례 신속 정비



공직자 적극행정 면책 / 인허가 간주제 확대 등

→ 규제개혁 공직자 행태 변화 유도



중앙과 지방이 함께하는 규제개혁

신산업 규제혁신

민간주도 신산업투자위원회 구성(16.3.18) → 271개 과제 발굴, 255개 개선방안 확정(수용률 94%)

개선 원칙

- ① 원칙 개선 예외 소명
- ② 사전 허용 사후 보완
- ③ 국제수준 규제 최소화

중점대상

- ✓ 무인이동체
- ✓ ICT 융합
- ✓ 바이오헬스
- ✓ 에너지·신소재
- ✓ 신서비스

주요 개선과제

- 자율차 임시운행 구간 네거티브 전환
- 드론 사업 범위 네거티브 전환
- 세계최초 IoT 전용 전국망 구축
- 개인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마련
- 첨단 의료기기 허가 및 신의료기술 평가 기간 단축
- 응급상황 시 3D 프린팅 환자맞춤형 의료기기 허용
- 비트코인 제도화 근거 마련 및 망분리 시범사업 추진

4차 산업혁명 대비를 통한 미래먹거리 창출

규제개혁의 파수꾼,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정책의 컨트롤 타워

- 규제정비종합계획 수립·시행·평가
- 정부 주요 규제개혁 정책 심의·확정



규제개혁위원회 현장성 강화

- 분야별 전문 소위원회 개최
- 외부전문가 합동 현장실사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규제 심사 관련 제철시설 현장 실사 (15.7.16, 포항 포스코)〉

규제개혁의 파수꾼, 규제개혁위원회

엄정한 심사를 통한 무분별한 신설·강화 규제 예방

- 지난 4년간 87회 본위원회와 132회 분과위원회 개최
- 중요규제 개선·철회 권고율 달성 (4년 평균 60.4%)

구분	총계	2013	2014	2015	2016
예비심사	4,862	1,200	1,148	1,024	1,490
중요규제	454	163	138	96	57
개선철회 권고율(%)	60.4	61.9	60.8	54.1	64.9

일몰규제의 재검토를 통한 기존 규제의 합리화

- 기한도래 일몰규제의 재검토를 통한 규제품질 제고, 국민 부담 완화
- '16년 4,240건의 일몰규제 심사를 통해 규제 폐지 201건, 규제 개선 1,399건 총 1,600건의 규제 합리화 (개선율 37.7%)

현장체감 경제효과 및 평가



1차 규장 이후
대표적인 현장 체감사례 341건 분석
(*16.12월, KDI)

→ 약 17조 4천억의
경제적 효과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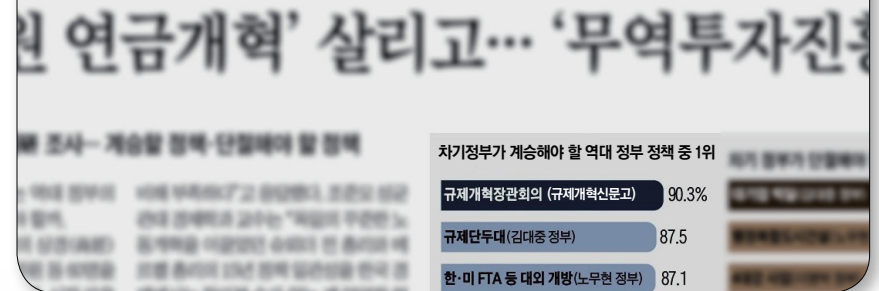
일자리 창출 효과 입증



**새 정부에서 계승해야 할
역대 정부정책 설문조사**

(상경(商經)계열 교수 및 연구소 대상 실시(조선일보, '17. 4. 19))

→ **규제개혁 장관회의 · 규제신문고**
1위 선정



"중단없는 규제개혁" 촉구

향후 과제 : 중단없는 규제개혁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혁신

경제규제 과감한 혁파, 생명·안전·민생 규제 보완·강화 (two-track)

미래대비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융복합 기술 기반
규제혁신

활력제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덩어리규제 정비 및
서비스규제 혁파

민생안정

중기·소상공인 부담
경감 및 서민·사회적
약자 애로 해소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감사합니다



국무조정실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